기후정치 진단 및 평가와 과제

2024. 8.

노회찬재단

기후정치 진단 및 평가와 과제

2024. 8.

김현우 탈성장과 대안 연구소 소장

본 연구보고서는 노회찬재단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 노회찬재단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1장 서론: 기후정치의 의미와 중요성 ····· 1

1. 연구의 배경 ····· 1
2. 선행 연구 검토와 최근의 동향 ····· 1
3. 기후정치의 정의와 연구의 관점 ····· 3

2장 기후정치 논의의 전개와 심화 ····· 5

1. 기성 화석 자본주의와 대의 민주주의 ····· 5
2. 기성 인식론과 기후정치 ····· 6
3. 기성 자본주의 체제와 기후정치 ····· 8
4. 기성 정치의 관성과 새로운 기후정치 ····· 9

3장 기후정치의 현실과 다른 정치의 모색 ····· 11

1. 제도 정치의 변화: 미국 선라이즈 운동과 제도 정치의 급진화 ····· 11
2. 제도 외 정치의 모색: 기후 시민의회의 실험 ····· 12
3. 계획과 참여 민주주의의 재소환: 지구의 절반 사회주의 ····· 15
4. 정치 주체와 의제의 확장: 독일 등 기후소송에서 자연법까지 ····· 18
5. 기후정치와 운동의 새로운 감각과 기제: 녹색 정동 ····· 19

4장 한국 기후정치, 현황과 분석 ····· 21

1. 한국 기후위기 여론 지형 ····· 21
2. 22대 총선의 기후운동과 기후정치 ····· 23
3. 기후총선의 결과와 평가 ····· 26
4. 한국의 정치체제가 가로막는 기후정치 ····· 27
5. 한국의 성장주의가 가로막는 기후정치 ····· 29

5장 결론: 정치와 관계의 재구성을 위한 제안 ····· 33

1. 기후위기 시대, 정치의 의미와 방식의 전환 ····· 33
2. 정당책임제와 기후 시민의회라는 대안 ····· 34

3. 기후정치와 기후운동의 전략과 과제 ····· 36

<참고문헌>

1장 서론: 기후정치의 의미와 중요성

1. 연구의 배경

기후위기는 우리에게 여타의 사회정치적 위기와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자연 현상이자 사회 현상이기도 하다. 기후위기는 기성의 법제도와 경제적 관행뿐 아니라 제도화된 학문적 접근과 인식론으로도 충분한 대처가 어렵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정치를 '국가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자가 그 영토와 국민을 위하여 실행하는 여러 가지 일 또는 국가의 권력을 획득, 유지, 조정, 행사하기 위해 전개하는 사회적 제반 활동'[1]이라 정의하는 것 역시 기후위기 앞에서 너무 안일하거나 완전히 허구적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현재의 정치는 국제 기후체제 수준에서나 일국적 정치 차원에서나 기후위기 대응에 완전히 실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지 정치인 개인들의 자질 부족이나 정치 제도의 부분적 결함 때문이 아니다. 화석자본주의가 빚어낸 현재와 같은 대의 민주주의 제도와 우리의 인식을 제약하고 고정시키는 성장주의는 현 상태 유지(business-as-usual)의 대응을 지속시키면서 실현 가능하지 않은 국지적이고 표피적인 기후 처방을 되풀이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우리는 논의와 실천 역시 현 상태 유지에서 벗어나려면 이러한 기후위기 대응 불능의 기후정치를 지속하게 하는 이유들을 깊이 들여다보고 기후위기를 다룰 수 있는 다른 정치, 나아가서 정치의 개념과 작동 방식 자체를 전환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후정치를 둘러싼 논의와 운동의 사례들을 통해 기후정치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의 조건들을 탐색하고, 한국의 역사와 정치 구조가 갖는 특징들이 기후정치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기후정치의 논의를 심화하고 현실 정치와 운동에서 토론할 수 있는 기후정치의 대안과 의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검토와 최근의 동향

기후위기가 과학자 공동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훨씬 이전에 이미 환경과 정치 제도 및 관행과의 관계를 탐구하는 작업들이 존재했다. 대표적으로 1972년 로마 클럽의 『성장

1)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21세기 정치학대사전"에 실린 '정치'의 정의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의 한계』, 그리고 1986년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는 지구 용량의 한계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현 정치 제도와 관행 역시 한계 또는 심각한 무능력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했다(도넬라 H. 메도즈 외, 2021; 벡, 1997).

1988년에 유엔 산하 조직으로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가 설립되고 1990년에 1차 평가보고서가 발간되면서 기후변화는 소수 과학자들의 영역을 벗어나서 국제 정치의 논의 의제로 본격적으로 부상했다. 또한 1997년 제 3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3)에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고 각국 정부에 구체적인 과제가 부여되면서 기후변화는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에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하지만 이때까지 기후변화는 여러 환경 및 정치 이슈 중 하나로만 간주되었다.

2006년에 발표된 『스턴 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가까운 미래의 정치경제 사이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분기점이 되었다. 영국의 경제학자 니콜라스 스턴 경은 현재에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적절할 투자와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래에 더욱 큰 비용을 들이더라도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논증했다. 그리고 이러한 예상과 현재의 정치적 대응 사이의 간극과 해결해야 할 과제가 가시화되었다.

2009년에 발간된 앤서니 기든스의 『기후변화의 정치학』은 현 정치 체제가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문제는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다룬 최초의 접근이었다. 기든스는 실제로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한 그 어떤 실효적인 정책도 갖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로는 국제 무대에서 그리고 아래로는 지역과 도시와 지방까지 이르는 다양한 영역에서 '다층적 거버넌스'가 발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기든스, 2009). 이후 기후변화는 오바마 정부의 그린뉴딜 같은 대체로 실용적인 국가적 경제 정책 프레임과 결부되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성 정치의 한계에 주목하며 정치 자체의 전환을 모색하는 논의로 전개되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러서 그레타 툰베리로 대표되는 2019년의 세계적 기후운동의 물결은 기후변화를 넘어선 '기후 비상사태' 또는 '기후위기'라는 상황 진단을 본격화했고, 이와 함께 기후위기의 이론적 논의와 정책적 대응 모두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와 관련한 논의는 기후위기에 대한 인권적 접근과 체제 전환 요구를 포괄하는 '기후정의' 논의, 기후위기와 대응에 대한 심리적 및 감정적 접근, 현재의 과학과 교육 및 정치 체제의 근본적 한계와 총체적 붕괴의 전망까지 제시하는 '심층적응'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조효제, 2020; 벤델 외, 2022).

북미의 비판 지리학자 조엘 웨인라이트와 제프 만의 『기후 리바이어던』은 기후위기 미래에서의 정치 체제를 과감한 이념형으로 탐구한 기후정치 논의의 프레임을 크게 진전시키면서 관련 논의를 자극한 연구다(웨인라이트·만, 2023). 또한 최근 의미있는 진전은 과학의

정치화와 통섭적 접근으로, 이러한 논의들은 미래 전망과 적극적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요한 록스트룀 등의『브레이킹 바운더리스』, 베티스와 펜더그라스 등의『지구의 절반을 넘어서』, 로마클럽의 가장 최근 후속작인『모두를 위한 지구』등을 참조할 수 있다(록스트룀 외, 2022; 베티스 외, 2023; 딕손-드클레브 외, 2023).

이러한 모색의 연장선 상에서 기후정의와 체제 전환을 위한 일련의 제안들이 유용한 구체적인 의제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유럽 중심의 탈성장 연구 공동체에서는 에릭 올린 라이트의 변혁 이론을 기후위기 대응과 연결하면서 체제 전환의 시나리오와 변혁의 정치 블록을 제안하고 있다(Barlow et al, 2022). 요르고스 칼리스 등의 “성장 없는 그린뉴딜”(Mastini et al, 2021), 독일 탈성장 아이디어 연구소의 기후정의 블록(Konzeptwerk, 2023), 다이아나 스튜어트 등의 “체제 전환을 위한 기후 의제”(Staurt et al, 2024) 등도 이러한 범주에 해당한다.

기후정치에 관한 연구 문헌들은 수렴되기 보다는 주제의 범위와 깊이 모두에서 확산되고 차별적으로 심화되는 단계에 있다. 체제 전환의 열려있는 길과 탄소예산 소진이라는 시간적 제약, 트럼프주의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돌발적인 지정학적 변수 속에서 기후위기는 정치에 대한 관점 변화, 정치 제도와 관행의 현실적 변화 제안, 경제와 정치의 분리 및 사회운동과 제도 정치의 분리 자체에 대한 재고, 나아가서 다른 문명과 정치에 대한 상상으로 우리에게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3. 기후정치의 정의와 연구의 관점

본 연구에서는 기후정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다루고자 한다. 첫째, 새로운 물리적 및 경제사회적 현상이자 의제로서 기후위기를 다루는 (제도/비제도) 정치를 의미한다. 이는 기성의 정치가 기후위기라는 새롭고 특이한 현상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거나 다루기 어려운 구조적 이유가 있음을 강조하는 정의다. 따라서 기후정치는 기후위기를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많이 수용하고 정치 의제와 예산 등에서 중심적인 것으로 삼는 정치로 이해된다.

둘째, 기후위기가 기존 정치의 관행과 제도를 바꾸는 현상과 결과를 의미한다. 이는 기후위기가 단지 제도 정치 내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관련 사업에 예산을 많이 배정한다고 해결되는 일회성 문제가 아니라, 광범하고 구조적인 사회경제적 요인과 결부된 것이라는 인식을 배경으로 한다. 따라서 기후정치는 근대적 대의제 민주주의와 삼권 분립, 사회 계약 같은 핵심적 정치 원리 원칙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기후위기를 해결하거나 적응할 수 없다

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다른 방식의 정치 소통과 정치 제도의 도입과 실험이 강조된다.

셋째, 기후위기 속에서 정치 자체의 의미와 방식의 재구성을 의미하는 보다 넓은 정의다. 이는 근대성이 부과한 인식론인 자연과 인간 사이의 이분법을 허물고 비인간 주체까지 포함하는 다중적 행위자를 포괄하는 행위 준칙과 세계관을 요청하는 접근이다. 이러한 접근을 어떤 정치학적 개념으로 정리하기는 쉽지 않으나, 예를 들어 '신유물론'과 '플루리버스'의 세계관을 정치의 개방적 확장과 변형 속에서 담아낼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물론 이 세 가지의 정의가 배타적이거나 고정적인 것은 아니다. '민주적 혁신' 또는 '민주주의의 급진화'와 '녹색정동' 같은 개념과 의제들은 특히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정의 사이를 가로지른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정치를 하나의 정의로 국한하는 대신에 이러한 정의의 변동과 상호 교차 속에서 기후위기와 정치 모두에 대한 인식을 자극하고 확장하고자 한다. 따라서 기후정치 논의의 전개와 심화, 그리고 현실 정치에서의 사례와 실험들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정의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기후정치의 내포와 외연을 그려 보이려 한다. 그리고 한국의 기후정치와 운동의 동향을 통해 한국에서 생산적인 기후정치 논의의 방향을 도출하려 한다. 끝으로 정치와 관계의 재구성을 위한 몇 가지 제안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삼고자 한다.

2장. 기후정치 논의의 전개와 심화

1. 기성 화석 자본주의와 대의 민주주의

지금 정형화되어 있는 대의 민주주의가 정치적 논쟁과 투쟁의 자연스러운 합의 결과가 아니라 화석 자본주의라는 토대 위에 형성된 것이라면 기후위기의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먼저 에너지의 물리학과 정치학을 보다 깊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티머시 미첼의 『탄소 민주주의』는 탄소 연료와 특정한 종류의 민주적 또는 비민주적 정치 사이에 만들어진 일련의 연결점을 면밀히 추적하여 화석 연료와 민주 정치 사이의 관계를 탐구한다. 미첼에 따르면 보통선거 제도 쟁취에 앞장선 노동운동의 주력은 석탄을 캐고 운송하는 사람들이었다. 지배 엘리트들이 이런 움직임을 불편해할 즈음 마침 세계 대공황이 터졌고, 석탄에서 석유로 동력원이 바뀌었기에 케인즈주의 경제 정책이 가능했다. 경제 성장을 측정할 지표로 국민 총생산(GNP) 개념도 이때 처음 등장했다. 그리고 '경제'가 잘 돌아가야만 '정치'(민주주의)도 지탱될 수 있다는 생각은 새로운 시대의 상식이 되었다(미첼, 2017).

미첼은 우리가 속한 사회기술적 세계가 석유의 등장으로 어떻게 재조직되고, 이 과정에서 어떻게 특정 종류의 민주주의 혹은 비민주주의가 발현되는지를 보여준다. 지금의 대의 민주주의는 자율적인 발전의 산물도 아니었을뿐 아니라, 에너지 체제의 한계를 정치 제도 내에서도 재생산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첼은 재생에너지의 시대에 어떤 정치와 민주주의가 가능할지는 공백으로 남겨둔다.

에너지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관해서는 미국의 에너지 물리학자 에이머리 로빈스의 논의가 선구적이다. 그는 1976년에 <포린 어페어스>에 "에너지 전략: 가지 않은 길?('Energy Strategy: The Road Not Taken?)"이라는 제목의 32쪽짜리 논문을 발표했다. 로빈스가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제목을 패러디해서 전달한 메시지는 에너지 정책에도 두 개의 길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는 당시의 선진국 정부와 기업들이 선호했던 것과 같이 화석에너지와 핵에너지의 중앙집중식 공급에 치중하는 '경성' 경로이며, 다른 하나는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의 유연하고 지역분산적인 수급과 민주적 논의를 중심으로 하는 '연성' 경로다. 로빈스는 화석연료와 핵발전을 유지 또는 확대하면서 재생에너지도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또한 그는 연성 에너지 경로가 전 세계의 정치적 스트레스를 경감시킨다는 점을 부각시켰다(Lovins, 1976).

로빈스의 '연성' 에너지 체제와 보다 민주적인 정치 체제는 친화성을 갖지만 그 자체로 긍정적인 미래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미첼의 논의는 적어도 '탄소 민주주의'의 주

체와 방식의 지속 불가능성 또는 문제 해결의 한계를 알려준다.

2. 기성 인식론과 기후정치

C. 더글러스 러미스는『경제성장이 안 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의 첫 장에서 '타이타닉 현실주의'를 고발한다. 현실주의적인 경제학자는 타이타닉호에 "전속력으로"라고 명령한다. "속력을 떨어뜨리면 안 된다"고 한다. 선원들이 자신의 임무에 충실할수록 타이타닉호는 더 빨리 빙산과 충돌하게 될 것이다. 마침내 빙산에 부딪힐 거라는 것은 알고 있더라도, 그 빙산은 아직 보이지 않아서 현실적인 얘기라고 이해하기 어렵다. 귀에는 들어와도 그것은 아직 볼 수는 없다 볼 수 있는 것은 타이타닉호라는 배뿐이다(러미스, 2011). 이 이야기를 지금의 제도 정치로 연결하자면, 성장을 하면서 기후위기도 해결하자는 정치인들과 유권자들에게는 기후 타이타닉호가 세계의 전부이며 유일하게 가능한 선택이다.

인도의 문인 아미타브 고시는 "기후위기는 문화의 위기이자 상상력의 위기"라고 본다. 부상하는 부르주아적 질서의 현실 안주와 자신감(점진적 모델, 법칙성, 단절의 사고 습성)은 기후위기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을 가로막는다. 나아가서 그의 책 마지막 장에서 '기후위기와 정치'라는 제하에서 파리협정이라는 국제 협약의 공식 텍스트와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통합 생태학의 텍스트를 비교하는 것은 극적이기까지 하다. 국제적 기후 전문가들과 각국의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합의하여 작성한 파리협정의 텍스트는 온갖 수식 문구로 치장되어 있지만 기후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빙빙 돌려서 뭉개버리는 데에 반해, 교황의 회칙은 자본주의와 성장주의라는 기후위기의 동인을 분명히 적시하고 분명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고시, 2021).

기성 자본주의 체제가 기후변화의 원인일 뿐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인식마저 방해하는 것을 스튜어트 등은 "이데올로기적 부인(ideological denialism)"이라고 규정한다(Staurt et al, 2024). 게다가 문제는 기후위기는 근대적 민주주의가 접해 보고 대응해보지 못했던 독특하고 장기적인 현상이라는 점이다. 데이빗 월러스 웰즈와 조지 마셜은 기후 전문기자와 기상학자의 시각에서 왜 지금의 정치와 문화는 기후위기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지를 파헤친다(웰즈, 2020; 마셜, 2018).『심층적응』이 출발하는 문제의식 역시 현재의 과학 이론이 갖는 기후위기 전달법의 한계다(벤델 외, 2022). 심지어 기후위기를 이해하고 걱정하는 이들조차 다양한 이유와 맥락에서 '탄소 비전 터널' 또는 '기후지체 담론'에 갇힌다. 이러한 근시안적이거나 환원론적인 시각은 기후위기에 대해 협소한 인식을 유발

하며, 현 상태 유지(BAU)의 해법을 강화하거나 대안적 정치와 경제에 대한 논의를 가로막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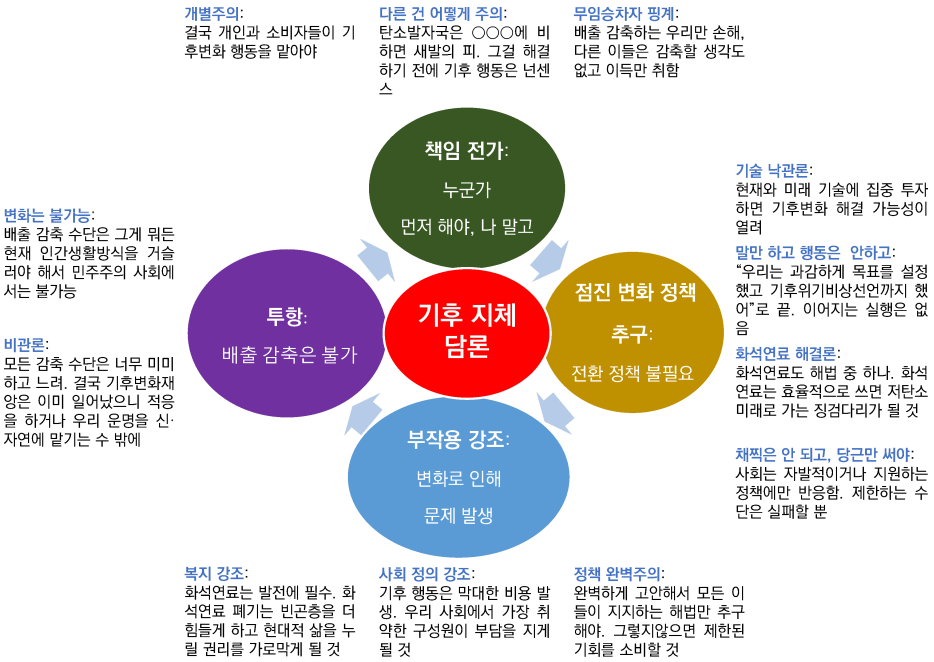

그림 1. 기후지체 담론 (Lamb, et al, 2020).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번역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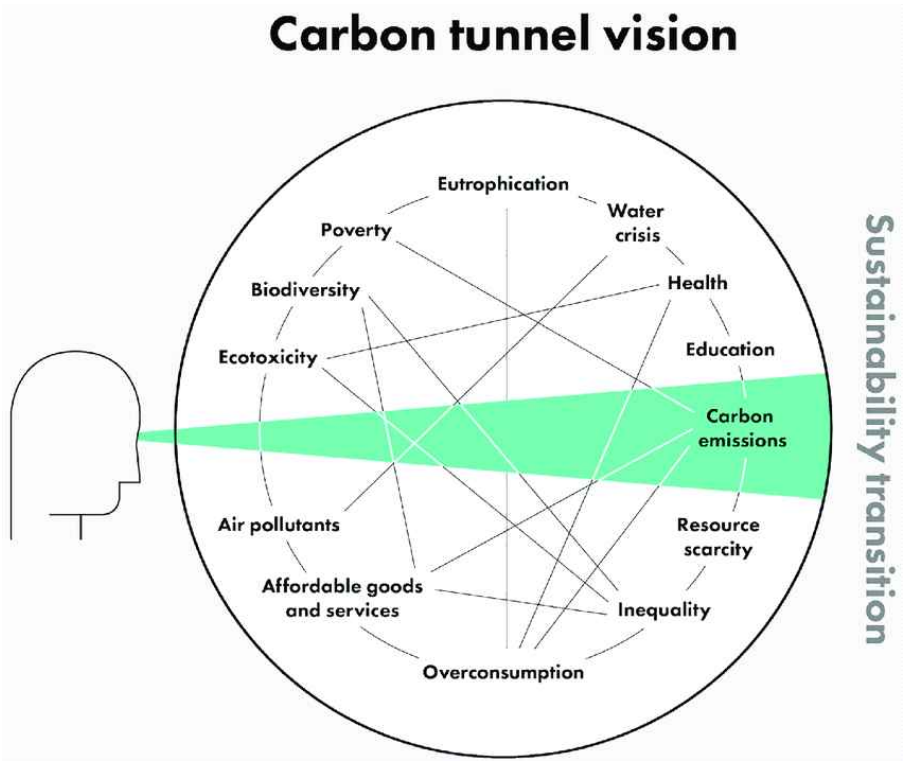

그림 2. 탄소 터널 비전 (Deivanayagam & Osborne(2023)

3. 기성 자본주의 체제와 기후정치

웨인라이트와 만의『기후 리바이어던』은 종말론적이거나 처방적이지 않다. 즉, 기후위기 때문에 어떤 미래가 불가피하다거나 어떤 대안으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제가 말하듯, "우리 행성적 미래의 정치 이론"을 광범하게 조망한다. 그들은 기후변화는 "현 질서로는 답이 없는 정치적 문제를 제기한다"고 본다. 토머스 홉스가 내전을 피하려면 불가피하게 국가적 주권자, 즉 '리바이어던'의 창조가 필요하다고 믿은 것과 마찬가지로, 지구적 위기의 시대에는 지구적 주권자, 즉 세계 제국이 필요할 것이지만 그 현실태는 쉽게 설명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다.

이들은 기후위기를 자본주의 내부에서 해결 가능한지 여부와 지구적 주권자의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네 개의 이념형적 기후 정치 체제를 제시한다. 현재의 기후 리바이어던에 해당하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등은 자본주의 내에서 지구적 기후 질서를 만들어가고자 하지만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중국의 기후 대응에서 연상할 수 있는 '기후 마오'는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확장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그리고 트럼프나 일론 머스크 같은, 기후위기 앞에서도 길들여지지 않는 야수같은 국가와 기업들인 '기후 베헤모스'가 있다. 저자들은 아직 무어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자본주의 외부에서 지역적이고 공동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기후 X'에 희망을 걸지만 그야말로 이념형의 단계다.

이들의 논의에 대해 릭 서얼(Rick Searle)은 결국 현실에서는 '선한 베헤모스'를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가 생각하는 '선한 베헤모스'는 대다수의 국내 및 국제 의제가 환경적 관심사에 의해 견인될 정도로 충분히 녹색인 정치를 펼치는 국가일 것이며, 또는 자신의 모든 주권적 권력을 기후변화와 그와 관련된 환경 위기에 대응하는 데 사용하는 국가(그리고 성공한다면 궁극적으로는 뜻이 맞는 국가들의 동맹)일 것이다. 서얼은 그런 국가가 지금까지 현존하지 않았다면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는 그것을 부득이 발명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오로지 그런 국가를 통해서만 집단적 우선 사항이 구속력이 있는 정책과 법률로 전환될 수 있을 따름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런 선한 베헤모스가 하나의 세계 국가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지만, 우리의 현행 지구정치적 세계와 꼭 마찬가지로 규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구 정치의 현실을 고려하면, 그런 선한 베헤모스가 더 크고 더 강력할수록 그 영향력은 더욱더 지구적일 것이다. 그는 선한 베헤모스들이 도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후변화의 위기를 벗어날 기회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Searle, 2019).

	전 세계적 통치권력	반(Anti) - 전 세계 통치권력
자본주의	기후 리바이어던: 지속가능한 자본주의의 표피적 개편, 글로벌 탄소 시장, '녹색' 케인즈주의, 세계 은행과 유엔이 조율하는 국제 질서. 좋은 조치를 취하는 세계 정부와 함께 하는 녹색 소비주의	기후 베헤모스: 자본주의가 기후위기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그리고 어떤 마오주의 국가도 장악하지 못한다면) 세계가 포퓰리즘 파벌로 전락하고 국가들이 국제 협약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 부자들이 해치를 덮고 국경을 닫고 폭풍을 기다리는, 모든 국가가 이기적인 트럼프주의 행성이라는 결과
비-자본주의	기후 마오: 모든 국가의 배출량을 규제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인구를 제한하는 권위주의적 사회주의 국가	기후 X: 저자들이 수줍게 부르는 상향식 반자본주의 정치. 보다 희망적인 미래를 나타내는 X는 기후 정의에 대한 요구에서 이제 막 등장하기 시작. 보이콧, 봉쇄, 파업, 나오미 클라인의 Blockadia. 그러나 리바이어던에 의해 삼켜질 수 있음

표 1. 기후위기 시대 정치 체제의 네 가지 이념형

4. 기성 정치의 관성과 새로운 기후정치

다른 한편에서는 기성 정치의 관성을 타개할 새로운 정치에 대한 제안들도 체계적이지는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우선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에서 "자본주의 대 기후"라는 문제틀을 제시했던 나오미 클라인은 화석 자본주의의 흐름을 중단시키는 '블로카디아(Blockadia)'에서 한발 더 나아가고 있다. 클라인은 『미래가 불타고 있다』에서 "정치 혁명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과학이 말할 때" 우리는 무엇을 이루어야 할 것인지를 묻는다. 클라인은 기후재앙에 맞설 급진적 그린뉴딜에서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클라인 2016; 2021).

'인류세' 대신 '자본세'라는 명명을 선호하면서 '화석 자본' 체제에 대한 관심을 주장하는 안드레아스 말름은 기후위기와 같은 장기적 비상사태에서 생태적 레닌주의를 소환한다(말름, 2021). 그리고 이제는 탄소 자본주의의 "파이프라인을 폭파"할 운동의 필요성을 말한다. 하지만 우리 시대의 생태주의자 레닌과 녹색 봉기하는 인민의 조직은 누구인지, 그리고 봉기의 때가 언제인지는 말름에게도 불분명하다. 말름과 다소 궤를 달리 하지만 사이토 고헤이는 인류세 시대에 마르크스의 탈성장 코뮌주의를 어떻게 만들지를 생각해보자고

말한다(고헤이, 2021).

유럽에서 발전하고 있는 탈성장 담론은 기성의 정치가 봉착한 한계를 성장주의에서 찾으면서, 상상력의 해방과 변혁 정치를 연결하고자 한다. 그들이 중요한 이론적 자원으로 삼는 것은 미국의 사회학자 에릭 올린 라이트의 변혁론이다. 라이트는 1990년대부터 북미의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들과 '리얼 유토피아 프로젝트'라는 일련의 작업을 진행했는데, 이 또한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가능하고 시작할 수 있으며 또한 사회주의 경제와 정치의 실질적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의제와 실천들을 탐구해보자는 것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한 해에 큰 주제 하나씩을 탐구하고 결과물을 내놓았는데, 여기에는 기본소득, 민주주의의 급진화, 그리고 생태적 대안 등이 포함되었다. 라이트는 이러한 작업 속에서 계급 이론을 바탕으로 정치 이론에 몇 가지 중요한 아이디어를 던졌다. 그는 자본주의의 폐해를 한 번에 종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를 중화하거나 넘어서는 변혁의 차원들이 있다고 보았고, 자본주의를 한 번에 분쇄하거나, 공생하면서 변화를 만들어가거나, 자본주의의 틈새에서 대안적 삶과 경제를 실현하는 방법들이 존재하며 또한 필요하다는 생각을 발전시켰다.

탈성장 연구자인 에카테리나 체르트코프스카야는『탈성장과 전략』에서 라이트의 자본주의 해악 줄이기와 자본주의 구조를 넘어서기, 그리고 틈새적 변혁, 공생적 변혁, 단절적 변혁의 구별을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극복하는 운동의 양태들에 대입한다. 그리고 각각의 전략과 변혁 양태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대안의 모자이크'로서 탈성장의 전략적 캔버스를 이룬다고 본다(Barlow et al, 2022).

전략적 논리 변혁의 모드	자본주의의 해악 줄이기	자본주의의 구조를 넘어서기
틈새적 변혁: 자본주의 사회의 주변부, 일반적으로 권력이 지배하는 공간 외부에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임파워먼트를구축하는 것을 포함한다.	저항하기 예. 기후정의 시위	탈출하기 / 대안의 건설 예. 광범위한 정치적 개입 없이 생태마을 운영 / 타인과의 네트워크 구축
공생적 변혁: 궁극적으로 체제를 변혁하기 위해 기존의 제도적 형태를 변화시키고 현 체제 내에서 대중적 사회적 권력을 심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길들이기 예. 국가 CO2 배출량에 대한 절대 상한선을 설정하는 정책	해체하기 예. 장기적으로 대기업을 협동조합으로 만드는 정책
단절적 변혁: 기존 제도 및 사회 구조와의 첨예한 대결 또는 단절을 추구한다(단기적이거나 특정한 장소에서 수행될 수 있음).	멈추기 예: 불복종 행동	타격하기 예. 노동자의 공장 점거

표 2. 탈성장을 위한 전략적 캔버스 (Barlow et al, 2022)

3장. 기후정치의 현실과 다른 정치의 모색

기후위기 대응에서 현실 정치와 국가는 절대로 외면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차원이다. 하지만 기성의 정치와 제도가 중요하다는 것과 기성의 구조와 방식이 기후위기 대응에 충분히 유효하거나 적절하다는 것은 다르다. 기후위기 그 자체가 기성의 정치 구조가 만들어내거나 심화시킨 현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화석연료에 기반하는 성장 패러다임과 가장 경쟁력 있다고 간주되는 부문과 기업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시장 근본주의의 정책 논리는 어떤 유효한 합의와 규제 장치, 즉 민주주의를 형해화 시켰고 대의제도와 전문가 관료 정치는 중요한 결정을 현 상태 지속(BAU)을 해치지 않는 의제와 범위에만 국한시켰다.
하지만 기후위기 시대의 다른 정치가 무에서 생겨나는 것은 아니며, 라이트의 도식을 빌자면 기성 정치의 공생적이고 틈새적인 영역과 방식으로 출현하고 발전할 수도 있다. 이러한 단초들을 미국과 유럽의 정치와 운동, 그리고 학술과 법률적 논의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1. 제도 정치의 변화: 미국 선라이즈 운동과 제도 정치의 급진화

미국 급진 정치 '리부팅'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AOC)는 2016년 대선 당시 버니 샌더스 경선 운동에 참여하고, 선거 운동 참여자 중심으로 결성된 '새로운 의회(Brand New Congress)'라는 단체에 가입한 계기로 뉴욕 제14 선거구의 하원의원 후보로 출마하게 되었다. AOC는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민주당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 의원의 집무실을 점거한 선라이즈 운동(Sunrise Movement) 농성 현장을 지지 방문하면서 미디어의 주목을 끌었고 기후변화에 대한 실효성 있는 특별위원회(Select Committee) 구성을 촉구하게 된다.
AOC와 동료들은 이들은 2018년 중간선거와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화석연료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지 않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약속한 후보들을 지지하게 되고, 이후 '그린뉴딜' 정책 채택을 촉구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러한 대중운동의 압박에 힘입어 AOC는 2019년 2월 7일, 에드 마키 상원의원 등 하원의원 64명, 상원의원 9명과 함께 그린뉴딜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AOC가 촉매가 된 미국 청년 사회주의 운동의 급진화와 대중화는 민주당의 그린뉴딜을 통해 제도권 내 기후 정치를 급진화시키고 현실 의제화한 대표적

인 사례로 꼽힌다.

그런데 미국은 대통령 중심제와 강고하게 굳어진 양당 정치의 국가다. 때문에 이들은 민주당을 통한 압력의 정치를 기후 사회운동 및 청년 사회주의 운동의 동력을 타고 시도했고, 일정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이는 가능성의 측면이기도 하지만 승자 독식 대통령제와 양당 정치의 한계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다. 반면에 내각제와 정당간 그리고 정당과 시민사회(노동조합) 사이의 협의 정치의 전통을 갖는 독일의 경우 제도 정치 역시 기후위기에 점진적으로 적응해왔다. 최근 몇 년 사이 독일에서는 '기후보호법'과 탈석탄 위원회 같은 중요한 입법과 거버넌스가 연정 안팎의 정당과 시민사회 사이에서 비교적 큰 진통 없이 합의를 통해 가능했다.

독일 정부는 70년대 석유 위기 이후 탈화석에너지와 탈원전을 위한 폭넓은 논의와 연구를 진행했고, 탈원전 합의는 정부가 바뀌어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이 에너지전환에 위기를 가져왔지만 2023년 봄을 맞아 모든 원전은 계획대로 제로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독일의 에너지 정책이 기후정책과 통합성을 갖고 지속성을 가진다는 것은 제도 정치에서도 법률과 관행에 따라 기후정치의 내용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김수진, 2024).

독일의 합의주의 전통은 의회 바깥의 거버넌스 수준에서도 기후정치의 차원을 일정하게 소화한다. 독일의 '탈석탄위원회'는 2038년까지 전면 탈석탄을 위해 핵심 이해관계자를 포괄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다양한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를 내놓았다. 물론 독일은 탈원전 합의와 에너지 이용 윤리위원회의 경험도 있으며, 산업계의 주요 현안은 노사간 '공동결정'이라는 전통도 있다.

미국과 독일의 사례는 의회 정치와 제도 정치의 조건과 자원이 기후위기를 진지한 의제로 만들고 사회 전체에 유의미한 시그널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는 효과적인 사회운동의 압력이 존재하거나 제도 정치의 대변성과 책임성이 보장될 때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2. 제도 외 정치의 모색: 기후 시민의회의 실험

데이비드 월러스 웰즈는『2050년 거주불능 지구』에서 기후 재앙을 막으려면 인류가 하나의 행성처럼 사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웰즈, 2020). 하지만 이는 다분히 막연한 희망론 또는 인간 본성론으로 들린다. 새로운 영성은 하루 아침에 오는 어떤 깨달음의 결과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무언가 계기나 과정이 있어야 현실성을 갖는다. 하지만 인간이

어떤 조건과 경험 속에서 다른 태도와 행동 방식을 보여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조건과 경험의 바탕은 투명한 정보 제공과 제한 없는 토론 그리고 인간과 비인간 존재를 포함하는 서로에 대한 배려다.

제이슨 히켈이『적을수록 풍요롭다』에서 소개하는 미국 대학 연구팀의 실험 결과는 하나의 힌트다. 그는 2014년에 한 연구팀이 사람들을 그룹으로 나누고 모든 세대에 걸쳐서 관리되어야 할 공통 자원의 일부를 각각의 몫으로 제공하는 실험을 했던 사례를 소개한다. 실험 결과, 참여한 68%는 자기 몫의 일부를 미래 세대가 사용 쪽을 택했고 나머지 32%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기 몫을 미래 세대에게 남겨두지 않았다. 이 이기적 소수로 인해 미래 세대에게 적은 자원만 남기게 되어 네 세대 만에 자원이 완전히 고갈되었는데, 지금 지구에서 일어나는 것과 닮은 꼴이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통해 집단적으로 자원 사용을 결정하게 하자 이타적 68%가 이기적 32%를 통제하여 미래 세대에게도 자원이 전혀 줄지 않는 지속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 연구팀은 열두 세대까지 실험을 진행했는데, 자원의 순고갈이 일어나지 않는 결과가 계속되었다고 한다(히켈, 2021).

한 사회에서 이러한 조건과 경험이 어떤 임계치를 넘을 때, 우리의 민주주의의 근육 역시 경계를 넘어 확장될 것이다. 우리의 자원과 미래를 둘러싸고 함께 토론하고 책임지는 집단적 감각이 형성되는 것이다. 기후위기 해결은 이러한 집단적 인식과 감각은 매우 넓고 다양한 문제에 적용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전문적 정치인과 관료들의 이너서클의 정치의 개혁을 넘어서는, 추첨식 민주주의를 포함하는 다른 형태의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영국과 프랑스 등 여러 나라와 도시에서 진행 중인 기후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 실험도 이런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영국과 프랑스 모두 2020년경 기후 시민의회가 실험되었는데, 모두 일정한 성과와 한계를 보였다(이지문, 2022; 김현우, 2023).

프랑스의 기후시민총회(Convention Citoyenne pour le Climat, CCC)의 경우 무작위로 선택된 150명의 시민으로 구성되었다. 기후변화라는 주제 내에서 식량, 주택, 고용, 교통, 소비의 다섯 가지 문제에 대해 워킹그룹으로 나뉘어 9개월 동안 운영되었고, 149개의 매우 구체적인 권고 사항을 도출했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은 시민총회 권고의 절반 정도만을 수용했고 구성원들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는 기후위기 앞에서 실제로 요구되는 것과 기성 정부가 할 수 있는 것 사이의 간극을 드러낸 것이었는데, 그것 역시도 이 실험의 성과 중 하나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영국 기후회의(Climate Assembly UK, CAUK)는 하원이 조직했고, 영국이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는 기후변화 법률을 충족할 수 있는 세부 과제에 대한 권장 사항을 발표하는 것이 주된 의도였다. 인구 대표성을 고려하여 108명의 영국 시민이 회의의

성원으로 선발되었고, 원래는 네 번에 걸쳐 주말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 탓에 인터넷으로 자료와 발언을 공유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을 거쳐서 2020년 9월에 50개 이상의 권고가 담긴 최종 보고서를 영국 의회에 전달했는데, 하원의 위원회는 이를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살펴 보면 프랑스의 기후시민총회가 더 광범하고 깊이 있는 의제를 다루었고 전국적인 대중 토론도 촉발시켰다. 이에 비해 영국의 기후회의는 다룰 수 있는 의제의 범위와 예산도 제한적이어서 상대적으로 영향은 적었다. 이러한 기후 민주주의 실험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가 제출되고 있지만 한두 번의 실험으로 성패를 말할 것은 아닐 것 같다. 적어도, 기성의 정치가 기후행동의 교착 상태를 해결할 수 없음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멸종반란(XR UK)은 기성 정당정치의 한계를 비판하며 기후 시민의회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먼저 기성 정치는 두 당의 정치인들이 청팀과 홍팀으로 나누어 당파적인 입장을 갖고 대립하는 것이 일상적 모습이다. 이에 반해 시민의회는 전문가, 이해관계자, 피해자들로부터 균형잡힌 정보를 듣고 소그룹 토론을 통해 공동의 결정에 도달한다는 책임성을 갖는다. 둘째, 기성 선거정치는 로비와 기부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들의 기득권은 공동선을 훼손하곤 한다. 하지만 시민의회의 성원은 임의로 임시적으로 소집되며 과정은 투명하다. 셋째, 선거정치의 정치인들은 시야와 의사 결정은 5년의 선거 주기에서 맞춰 개인의 재선과 소속 정당의 집권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단기적이다. 하지만 기후 및 생태 비상사태는 장기적인 조망의 의사 결정을 요구하며, 시민의회는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더 크다. 넷째, 선거정치의 대표적 형태인 대의제는 영국 인구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공정하지도 않다. 시민의회는 다양한 계층(성별, 연령, 인종 등)의 사람들로서, 배심원처럼 무작위로 선택되며, 자신들의 다양하고 생생한 경험과 의견을 가진 이들의 그룹이다.

『인간의 종말』의 저자들은 '민주주의적 근육을 훈련하기'의 측면에서 시민의회의 의미를 평가한다. 선거나 국민투표에서는 후보나 의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본 적 없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유권자가 공동으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반면에 시민의회에서는 의제가 무엇인지 정말로 아는 사람들만 결정권을 행사한다. 그들은 힘겹고 공개적이며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모든 주장들을 경청하고 모든 가용한 정보를 검토한 다음에 결정한다(슈테펜스 & 하베쿠스, 2021). 이는 심의 또는 숙의 민주주의 제도에 공통적인 특징과 효용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공론화 위원회' 같은 제도가 일회적이고 하나의 이슈만을 다루고 종료된다면 기후 시민의회는 구성과 운영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후변화의 해법을 둘러싼 매우 광범위한 의제를 포함하고, 정부의 기후 정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피드백할

수 있다는 차이를 가질 것이다.
어쨌든 영국 멸종반란은 기후위기의 진실을 받아들이고 화석연료 종식을 분명히 하라는 요구와 더불어, 영국 전역에 기후 시민회의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하원이 주도했던 기후회의가 미흡했을 뿐 아니라, 이제는 기후 비상사태 시민회의'들'을 설립하여 우리 시대의 가장 긴급한 문제들에 대하여 공정하고 장기적인 해법들을 이끌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요구다. 이는 기후 시민회의가 기존 대의제도를 보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대체하고 긴장을 불러 일으키며 새로운 민주주의의 내용과 방식을 확장할 필요성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현우, 2023).

3. 계획과 참여 민주주의의 재소환: 지구의 절반 사회주의

앞서 살펴본『기후 리바이어던』은 자본주의 내에서의 기후 정치 체제의 불가능성을 말하기는 했지만, 그 대안으로서 "기후 마오" 또는 "기후 X"의 현실성에 대해서는 유보적이다. 때문에 릭 서얼은 아쉽지만 "선한 베헤모스"를 기다리기로 한다. 하지만 자본주의 바깥으로 탈출하거나 자본주의의 해악을 줄이고 구조를 넘어서기 위한 기획의 필요성이 다시 확인되는 대목이다. 여기서 기후정치는 자본주의를 부분적으로 또는 전면적으로 해체하고 넘어서는 프로젝트를 회피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자유주의 시장이 정치를 복속시키는 구조를 넘어서서 사회주의적 계획을 통한 민주주의의 확장 또는 참여 민주주의의 재소환을 요구하는 주장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나오미 클라인은 지금이 계획 경제의 발상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생각을 이어 받아『미래의 지구』와『우리 모두를 위한 지구』의 저자들은 가까운 미래의 기후위기 대응 정치 제안들을 시나리오의 형태로 제시한다(홀트하우스, 2021; 딕손-드클레브 외, 2023).
특히 "지구의 절반 사회주의" 제안은 이념적 생태 사회주의나 규범적 탈성장 아이디어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치 의제로 상승시키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첫째, 생태적 위기에 대한 어떤 해결은 자본과의 단절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둘째,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물려받은 사회생태적 문제들이 사회주의 사회에서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암시를 피한다. 대신 진화생물학자 E. O. 윌슨이 지구의 절반을 야생 상태로 회복시키고 보존하여 기후위기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던 "지구 절반(Half-Earth)" 프로젝트 성공의 전제 조건으로 사회주의를 가정한다. 이 제안은 일부는 유토피아 소설, 일부는 정치철학, 일부는 기후 정책 분석 같다는 평가를 받는다. 저자들은 소련의 사이버네틱스와 수

학, 칠레의 ‘Cybersyn’ 프로그램, 기상학 및 통합평가 모델(IAM) 등을 활용하여 민주주의와 중앙 집중식 계획에 뿌리를 둔 대안 계획을 제안한다.

이들의 제안은 다음을 포함한다. “탄소 배출량 흡수와 생물다양성 복원 위해 지구의 절반을 재야생화할 것, 재생 에너지로의 급속한 전환과 세계 최고 부자들의 급격한 소비 감소, 에너지와 토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세계적인 비거니즘, 생산을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관리하기 위한 세계적인 사회주의 계획, 모두의 참여 - 심지어 당신!”(베티스·펜더그라스, 2023).

물론 이들의 제안은 계획 경제의 프로그램 자체가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성장주의와 기술 자본주의가 주도하는 기후 의제의 내용과 작동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관의 급진적 전환도 동반되어야 한다. 이는 국가 수준의 예산과 자원 배분의 원칙과 방식의 재편에 대한 요구 속에서 논의와 운동을 추동하면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그린뉴딜의 재론과 급진화는 그 유력한 매개가 될 수 있다.

물론 미국 민주당의 그린뉴딜이나 유럽연합의 그린 딜이 충분히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여전히 시장과 기술 의존적이라는 비판은 가능하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그린뉴딜과 같은 수준의 국가와 권역 범위 계획의 필요성을 무시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히켈과 칼리스 등의 “성장 없는 그린뉴딜” 제안은 과거 뉴딜과 그린뉴딜, 최근 보완된 그린뉴딜(GND 2.0)을 차이를 설명하고, 그린뉴딜이 탈성장 제안으로까지 연결됨으로써 더욱 현실성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뉴딜	GND 1.0	GND 2.0	탈성장
목적	고용, 총수요 촉진	성장 촉진, 고용, 환경 기준	기후변화 완화, 고용, 사회 및 환경 정의	성장 추구 탈피, 모든 환경적 압력 경감, 자율성/한계, 사회 및 환경 정의
기원	노동조합, 플랭클린 D. 루즈벨트, 뉴딜 연합	케인즈주의 경제학자, UNEP, 버락 오바마 대통령, G20	미국 적록 풀뿌리 운동 연합, 뉴 컨센서스, 미국 민주당 좌파, 영국 녹색당, 영국 노동당, DiEM25	풀뿌리 환경 활동가, 사회 및 환경 과학 연구자 집단
표현	프로그램, 공공근로 프로젝트, 재정개혁과 규제	여론, UNEP의 '글로벌 그린뉴딜' 정책 브리프, 미국 녹색당과 유럽 녹색당의 정책 제안, 신경제재단의 '그린 뉴딜' 보고서, G20의 경기순환 조절 녹색 투자	여론, 미국 하원 결의안 109호, 노동당 GND 플랫폼, 탈탄소화와 경제 전략 법안 2017-19, 정책 보고서들	학술 논문과 서적, 여론
결과	월스트리트 개혁, 농민과 실업자 구호, 사회 보장, 민주 그린뉴딜연합으로의 정치권력 이동	G20의 5,130억 달러의 녹색 촉진 금융	미국 선거들에서 후보 선정, 대중적 인식 제고 (Google 검색추세)	격년제 국제탈성장 대회, 유럽의회의 포스트-성장회의 (2018년), 학술적 담론들, 환경 NGO와 활동가 그룹들의 급진화
주 요 국가	미국	미국, 중국, 한국, EU	미국, 영국, EU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표 3. 뉴딜, GND 1.0, GND 2.0, 탈성장 내러티브의 비교 (김현우, 2024)

4. 정치 주체와 의제의 확장: 독일 등 기후소송에서 자연법까지

기후소송은 2015년 파키스탄 농부가 중앙정부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첫 사례로 알려진다. 항소법원은 정부의 지연과 태만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당했다고 판결했고, 이 결정으로 정부 각 부처에 기후변화 담당관을 임명하고 기후변화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2018년 콜롬비아에서는 청소년 청년 25명이 “미래 세대의 요구” 원고단을 구성해서 환경부를 제소했다.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아마존과 산림 보전 의무 방기하여 원고의 기본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1심은 패소했지만 대법원에서 승소했고, 판결은 산림 벌채 때 탄소배출 순제로 정책을 우선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래 세대라는 인격체 권리를 인정한 사례가 되었다.

더욱 유명한 것은 2019년 네덜란드 위르헨다 재단 등 900명이 정부가 온난화 방지를 위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함을 제기한 소송이다. 3심 모두 정부가 패소했는데, 정부가 2020년까지 25% 감축하지 않으면 유럽 인권협정 등의 생명권 조항을 위배한 것으로 판결했다. 이는 국내법 외의 국제적 인권 원칙을 근거로 판결한 최초 사례다.

최근 가장 의미심장한 사례는 독일의 기후소송 결과다. 독일 연방의 기후보호법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하고, 이 목표에 맞춰 각 부문에 연간 배출량을 할당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독일 환경단체 분트(BUND), 미래를 위한 금요일, 그린피스 등은 독일의 203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관련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며, 이를 ‘미래 세대의 기본권 침해’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4월 29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이 법이 미래세대의 자유권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헌법 위반의 부분이 있으므로 독일 연방의회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후보호법의 해당 조항을 헌법적 요구에 맞는 내용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발표했다. 위헌 결정문 직후인 5월 5일 독일 연방정부는 2030년 감축목표를 1990년 대비 55%에서 65%로 상향 조정하고, 탄소중립 목표 시기를 2050년에서 2045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의 연방기후보호법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에서도 2020년 3월 13일, 청소년기후행동의 원고 19명이 기후변화를 방치하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미흡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청소년의 생존권, 평등권, 인간답게 살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기후위기 방관은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헌법소원은 유지한 채 탄소중립기본법의 위헌 판정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했다(기본법 제8조 제1항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 목표.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은 40%). 이에 대해 2024년 5월부터 소송 제기 4년 만에 공개 변론이 개시되었다.

한국의 기후소송의 결과는 4개월만인 8월 29일에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030년까지 40% 감축을 명시한 시행령은 합헌, 즉 정부가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다만 2031년 이후 2050년까지의 구체적인 감축 목표와 계획이 법안에서 누락된 것은 미래 세대의 권리를 국가가 보호하지 못했으므로, 탄소중립 기본법의 8조 1항에 대해서 이를 보완하는 법 개정을 요구하는 한정적인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기후위기 대응에서 정부와 법률의 구체적인 책임을 다투고 미흡한 점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 결정은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 등 현 정부의 기후 정책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면죄부가 된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기는 판결이다.

하지만 이러한 국내외 기후소송 사례는 기후위기를 다루는 현재의 국가 계획과 법제도가 세대별 대변성과 책임성을 담보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미래 세대는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정책에 참여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가장 가혹한 피해를 입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최근 법학계 일각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자연법'과 철학적 조류로서 논의를 넓혀가고 있는 '신유물론' 또는 '포스트휴먼' 이론은 부르주아적 소유권 중심의 근대 법체계와 정치 제도가 갖는 한계로까지 비판을 확장하고 있다. 비인간 동물을 포함한 자연에 인격권을 부여함으로써 기후정치의 주체와 의제는 엄청나게 넓어지게 된다.

5. 기후정치와 운동의 새로운 감각과 기제: 녹색 정동

포스트 마르크스주의와 급진 민주주의 정치학자인 샹탈 무페는『좌파 포퓰리즘을 위하여』에서 신자유주의 권위주의에 갇힌 세계에서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찾기 위한 전략으로 포퓰리즘의 급진화를 적극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무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 권위적으로 변한 정치 지형을 고찰하면서 팬데믹이 가져온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 위기를 좌파가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한 대안으로 '녹색 정동'을 이야기한다.

무페의 주요한 문제인식은 기존 좌파의 합리주의가 '대중'을 단지 사회학적 구성물로만 보고, 보호에 대한 욕망 등 대중이 자연스레 갖는 정념을 외면함으로써 현실 정치에서 우익 포퓰리즘에게 밀리는 패착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무페는 우리/그들이라는 동일화의 형태를 구성하는 과정 속 정치 영역에서 중요한 부분인 공통의 정동(common affect)에 관심을 기울인다. 사람들이 행동하도록 움직이게 하는 것은 추상적 관념이 아니라 정동, 그리고 이러한 정동이 새겨지는 동일화 과정이기 때문이다(무페, 2022).

무페는 이 정동 정치와 좌파 포퓰리즘이 가장 강력하면서 가장 대중적으로 널리 확산할 수 있는 공통의 정치 현상으로 팬데믹과 더불어 전 인류의 비상사태로서의 기후위기에 주목한다. 팬데믹과 기후위기의 근원에 금융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있다면 '녹색 민주주의 혁명'을 중심으로 생태주의 투쟁과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접합시키고 민주주의를 급진적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종말』의 저자들은 프랑스 사회학자이자 신유물론자인 부뤼노 라투르의 견해를 소개한다. 라투르는 한 에세이에서 기후위기, 대멸종, 삭막해지는 풍경이 우리를 미치게 한다고 쓴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제 곤충도 없고 새도 없으며 물도 공기도 없다고 한 시민에게 알려주면, 그는 자신이 일하는 공장이 베트남으로 옮겨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발밑이 꺼지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이런 삶의 기반이 되는 '영토'에 대한 느낌에 대해 녹색 정동의 반응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생태 파시즘이나 포퓰리즘처럼 외부와 내부를 가르는 장벽을 세우는 반응이 있을 수 있다(슈테펜스 & 하베쿠스, 2021).

그런데 녹색 정동은 단지 정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적인 인지와 책임감의 측면이기도 하다. 슈테펜스와 하베쿠스는 코로나 상황에서 시민들이 보여 준 대응 양상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어낸다. 즉 시민이 무엇이 위태롭고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면 대다수의 경우에 책임감 있게 행동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독일 윤리위원회는 "정치와 사회가 당면한 갈등을 규범의 문제로 이해하는 감각을 키울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정동적 측면에 대한 관심은 한국의 기후운동에서도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후시민은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나 정치적 폭로를 통해서만 조직되는 것이 아니며,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기후 지체 담론을 넘어서는 유효한 기후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한국 사회에 여전히 팽배한 '기후침묵'과 냉소를 극복하는 데 있어 녹색 정동 개념은 중요한 정치와 운동의 자원 중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4장. 한국 기후정치, 현황과 분석

1. 한국 기후위기 여론 지형

한국 시민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을 자신의 일로 생각하거나 현실에서 심각하게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여기는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일례로 2022년 2월 한국갤럽이 발표한 한국을 포함한 40개국에서 실시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 관련 인식' 조사 결과(한국갤럽, 2022)를 보면, 지구온난화가 인류에게 심각한 위협인지를 묻는 설문에 39개국 응답자들은 86%가 동의를 나타낸 데 비해 한국 응답자들은 동의율이 93%로 더 높았다. 또한 자연재해의 증가가 지구온난화 때문이라는 데 대해서도 한국인(84%)은 다른 나라 사람들(81%)보다 더 높은 동의를 보였다. 하지만 '내 개인의 행동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들 평균 80%가 동의한 반면 한국인은 75%만이 동의를 표시했고, 실질적 노력은 개개인보다 기업과 정부가 기울여야 한다는 문항에 한국인(83%)은 어느 나라보다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평균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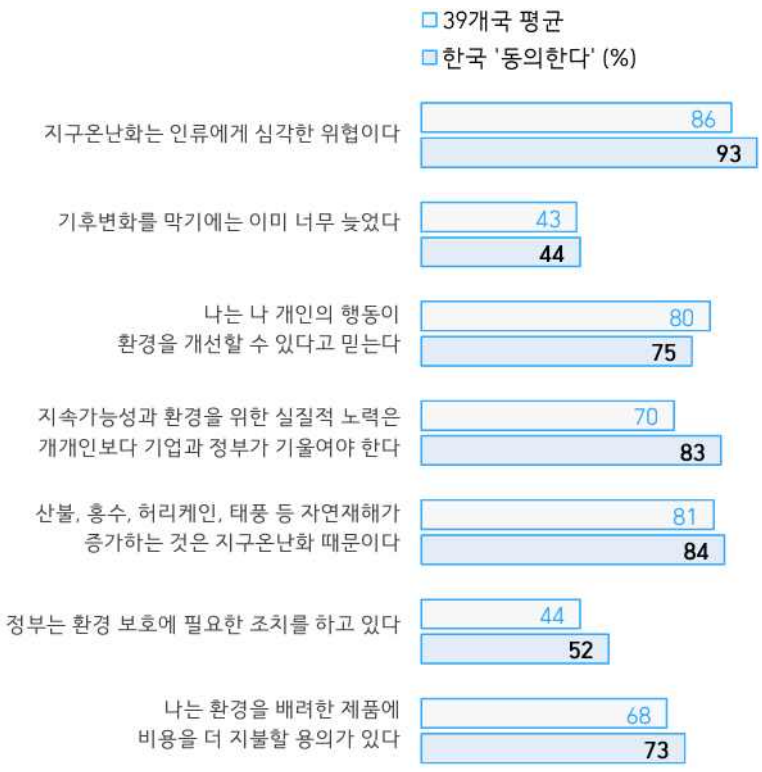

그림 3.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요약 비교 (한국갤럽, 2022)

2019년 7월 <세계일보>가 발표한 기후변화 인식 조사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준다. '기후변화는 심각하지만, 해결은 나중에'라는 태도가 강한 것이다. 한국 국민 10명 중 8~9명은 기후변화를 심각하다고 느끼지만, 당장은 경제성장이나 실업 등에 집중하고 기후변화는 장기과제로 두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조사에서 실업, 경제성장, 기후변화 등 우리 사회의 8가지 과제 가운데 '1년 안에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 과제'를 꼽으라는 물음에 경제성장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실업이 2위에 올랐고, 저출산·고령화, 빈부격차, 남북관계 등이 뒤를 이었다. 기후변화는 남녀·세대 갈등과 함께 최하위에 자리했다. 하지만 '10년 안에 해결할 과제'에서는 기후변화가 상위 3과제로 오르고, 30년 과제로 기간을 늘리면 저출산·고령화가 1위였고, 0.4%포인트 차로 기후변화가 2위를 차지했다.

이렇듯 전반적으로 한국 국민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근시안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기후 지체'와 '미래 할인'의 경향이 큰 것이다. 이런 여론 동향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정치권에서 활발히 논의되지 못하고, 주류 언론도 정쟁화된 단편적 주장만을 피상적으로 보도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여론과 인식이 정치 제도 및 관행과 상호 작용하는 기제를 살필 필요가 있다.

그림 4. 세계일보와 '공공의창'이 공동기획하고 한국여론연구소가 조사한 결과, (세계일보, 2019)

그런데 한국에서도 기후위기는 시나브로 제도 정치와 언론의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다. 한국 유권자의 1/3 정도는 기후위기를 대선에서의 정치적 선택에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용의가 있는 '기후유권자'라는 분석이다. 이는 로컬에너지랩, 녹색전환연구소, 더가능연구소가 함께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기후총선'으로 만들고자 '기후정치바람(준)'을 시작하며 실시한 여론조사를 근거로 한다. 이 조사는 시도별 1,000명, 전국 17,000명을 대상으로 전례 없이 대규모로 진행되었다.

기후정치바람은 기후 유권자를 "기후의제에 대해 알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기후의제를 중심으로 투표선택을 고려하는 유권자"(개념적 정의), 그리고 "기후정보지수 3.8점 이상 & 기후민감도 지수 25.6점 이상 & 기후투표(정당)의향을 가진 유권자"(조작적 정의)로 정의했다. 조사 결과 2023년 한국의 '기후유권자'는 주관적 이념성향 기준 진보층에 더 분포한다. 진보층 41.7%, 중도층 30.6%, 보수층 28.8%이 기후유권자로 나타나고, 성별로는 남성이 35.7%, 여성이 31.4%로 분포한다. 기존 조사들의 결과는 기후위기를 민감하게 느끼는 집단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았지만, 기후정치바람의 조사에서 기후유권자는 기후위기 민감도만이 아니라 기후정보 인지와 기후투표 성향을 함께 고려한 집단이라는 기준에서는 남성 유권자집단이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을 기준으로 보면, 18_29 < 30대≒50대 < 60세 이상으로 분포하여, 정보인지와 기후위기 민감도, 기후투표 성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후유권자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기후정치바람(준), 2024a).

이 조사는 규모와 조사 항목의 포괄성 덕분에 많은 함의를 제공한다. 하지만 기후 정보인지와 정치적 진보성 모두에서 연령 변수가 가장 규정적인 한국의 상황에서 평면적인 해석은 곤란해 보인다. 즉 기후위기 이슈에 대해서만 특별히 반응하거나 선거에서의 선택을 결정하는 동인이 있다는 증거는 없다. 또한 이 조사 결과가 협의의 선거 정치라는 의미에서의 제도적 기후 정치, 최소한 기후유권자 정치와 운동에 대한 기대를 높이지만, 그러나 이런 의사와 현실 선거 정치의 선택지 사이에는 큰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22대 총선의 기후운동과 기후정치

22대 총선에서는 시민사회의 기후정치 대응이 폭넓게 펼쳐졌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기후정치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1.5%의 기후시민을 조직하는 운동을 펼쳤고, 선거 기간 동안

316 에너지전환대회, 기후시민 열린마당을 개최했다. 기후정치시민물결은 '기후정치 원년 시민 선언'을 시작으로 기후총선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파했다. "2024 기후총선프로젝트"는 12대 기후에너지정책 과제를 제안하고, 정당과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기후유권자들은 "기후위기에 투표하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역 곳곳에서 워크숍, 토론회, 선언대회를 열고, 표를 조직했다. 경기도 포천, 서울의 동작구와 성북구, 경상남도 남해군 같이 기초지자체에서도 활발한 활동이 벌어졌다(이유진, 2024).

단체	주요활동
기후정치바람	2024년 총선부터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 선거까지 대규모의 기후위기 인식 조사, 선거 캠페인, 일상 캠페인 진행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치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1.5%의 행동하는 기후시민을 조직하는 운동
기후정치시민물결	기후위기와 생태전환 문제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 작가, 활동가들이 자발적을 결성한 모임. '기후정치 원년 시민 선언'을 시작으로 기후정치, 기후총선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파
기후총선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기후위기 기독인연대를 중심으로 출범. 교계의 요구 사항 7가지를 발표
2024 기후총선 프로젝트	12개 기후에너지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 정당과 정책 협약 체결
뉴웨이즈	2030 청년들에게 중요한 기후위기를 포함한 8가지 미래 의제를 선정하여 역공약집을 제시하고, 약속한 후보 공개
(사)소비자기후행동	697녕 후보자를 대상으로 기후위기 관련 정책에 대해 질의하고 응답 공개
2024 총선 시민네트워크	낙천 낙선 운동

표 4. 기후운동의 22대 총선 주요 활동 (이유진, 2024)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기후유권자 운동의 방안으로 "2024 기후정치 선언"에 동의하는 유권자들을 "기후시민"으로 등록하게 유도했다. 선언은 이렇게 말한다. "기후위기에 필요한 것이 체제 전환이라면 당연히 우리 기후 정치의 전환은 대의제라는 체제를 전환시킬 때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치 소비자로서 '단지 투표할 권리가 있는 자'로만 한정한 정치적 시민권을 회복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기후 정

치를 고민할 것이다. “정치는 투표일에 끝이 나는 파티가 아니다. 선거과 선거 사이는 정치가 멈추는 시간이 아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기후위기를 한국 정치의 최전선이 되도록 하는 기후 정치의 도전을 시작한다. ‘찬’과 ‘반’의 정치를 벗어나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는 기후 시민들이 기후 정치의 당사자로 등장할 수 있는 정치적 도약이 필요하다. 즉 새로운 정치의 주체들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된다.”(기후위기비상행동 2024a).

즉 단지 출마한 후보들 중 기후후보를 선택하는 것을 넘어서서 유권자 스스로 기후정치의 한 주체인 기후시민이 되겠다는 선언이었다. 이는 선거의 공간에서 협소한 수동적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후정치 담론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여기서 기후정치의 양태와 방법은 아직 모호하게 남겨져 있다.

청년기후긴급행동은 기후정의행진이 열리던 날 공개한 ‘생태공화국 통문’에서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생태공화국이란, 기후위기 시대 정치적 주체이자 생태적 존재임을 스스로 선언한 이들이 탈환할 국가의 청사진을 일컫는다.” 이는 기후위기 시대에 ‘다른’ 국가와 다른 정치적 주체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대의 민주주의 제도 정치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선언한 이들이 쟁취해야 할 임무를 표현하다. 이 역시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두 번째 수준의 기후 정치 주장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러한 기후유권자운동과 새로운 기후정치 기획에 대한 후보와 정당의 반응은 공약과 정책을 통해 어느 정도 분석할 수 있다. 그런데 기후정치바람 등 국내 16개 단체가 선거공보를 기준으로 전국 254개 선거구에 출마한 지역구 후보자 696명의 기후공약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후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168명으로 겨우 24.1%에 불과했다. 정당을 기준으로 기후공약을 제시한 후보의 비율은 녹색정의당(100%) 진보당(48%), 더불어민주당(39%), 국민의 힘(15%), 새로운미래(14%) 순이었다(기후정치바람(준), 2024b).

이에 대해 기후정치바람은 기후유권자는 준비되었는데 기후 후보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더욱이, 출마 후보의 공약에는 기후공약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개발 공약이 포함되었다. 후보 중 181명이 철도/도로 지하화, 342명이 주차장 확대, 196명이 그린벨트/상수원/고밀도 개발 등의 규제 완화 공약을 제시했다.

22대 총선의 당선자들의 기준으로 보면 지역구 당선자 254명 중 64명이 기후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당선자 161명 중 53명(33%), 국민의힘 지역구 당선자 90명 중 10명(11%), 진보당 1명 중 1명이 기후공약을 제시했다. 이는 기후 공약이 당선에 별 도움이 되지 못했거나 유권자에게 변별력 있는 선택지로 다가가지 못했음을 반증한다.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치특별위원회가 분석한 각당의 총선 주요 정책도 살펴보면 수미일관한 기후 정책 공약이 22대 총선에서 두드려졌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개발 공약이

나 기후위기 대응에서 상충적인 내용이 뒤섞여 있다. 비상행동은 전반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의 총체성에 비해 여전히 부문 의제로 다뤄지고 있으며, 기존 주요 정책과의 관계나 변화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평가했다(기후위기비상행동, 2024b).

정당	순번	10대 공약 분야와 제목
더불어민주당	3.	[산업자원, 환경, 농림해양수산]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뤄내겠습니다.
국민의힘	10.	[재정경제, 환경, 산업자원] 기후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생활
녹색정의당	1.	[산업자원, 건설교통, 환경, 재정경제] <기후> 탄소중립경제로 전환, 22대 국회 제1과제로
	8.	[농림해양수산, 산업자원] <생태/농어업/먹거리> 사람과 농어업, 동물, 자연 모두가 함께 공존하는 사회
새진보연합	1.	[과학기술정보통신·산업자원·환경] 재생에너지 전환과 '햇빛바람연금'
진보당	4.	[환경·산업자원] 기후, 생태, 민생을 위한 사회

표 5. 22대 총선에서 선관위 제출 10대 공약에 포함된 주요정당 기후 공약 (기후위기비상행동, 2024b)

3. 기후총선의 결과와 평가

22대 총선에서 기후시민과 기후유권자가 호명되고 언론에서 큰 주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의 결과는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선거 과정에서 기후위기가 심도있게 토론되지도 못했고 주요 정당의 정책과 공약으로 충분히 반영되지도 못했다. 선거 결과 역시 한국의 여론 지형과 제도 정치의 관성을 넘지 못했다.

무엇보다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으로 내걸고 정의당과 녹색당이 연합정당으로 선거에 나선 녹색정의당은 3%라는 의회 진출 최저선을 달성하지 못하고(2.14% 득표) 의회 진입에 실패한 것이 가장 상징적인 결과다. 물론 녹색정의당의 성적은 기후정치라는 잣대로 평가하기엔 너무 복잡한 배경 설명이 필요하다. 선거 직전 저조했던 정의당의 지지율과 지지층 이완 현상 속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강력한 양강 구도와 상호 증오 정치의 분위기가

녹색정의당의 입지를 더욱 좁혔다. 하지만 녹색정의당이 정책 공약 외의 담론과 활동에서 기후정치의 당위성과 현실성을 충분히 유권자들에게 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 내용적으로는 더욱 아프게 평가해야 할 부분일 것이다. 정의당과 녹색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에게조차 녹색정의당이 이루고자 하는 기후정치의 청사진과 의지가 구체적으로 다가가지 않았고, 오히려 보편화되고 탈색된 기후 의제를 여러 정당들이 채택함으로써 차별성이 줄어들었다.

녹색정의당 외의 제도 정치인들의 선거 결과를 보면, 기후환경 분야 정치인 중 22대 국회에 초선으로 진입한 의원은 7명이고, 4명은 재선에 성공했다. 그 중에는 기후운동가 출신들도 있지만, 선거 과정에서 기후관련 의제를 전면화해 당선한 것이 아니라 정권심판의 구도 아래 이들의 경력이 활용된 측면이 더 강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당선이 곧 기후정치인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요컨대, 이번 총선은 공약의 빈도와 신공항 건설 등 중요한 기후 의제에 대한 관심에서 볼 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모두 명실상부한 '기후총선'에는 미달했다. 기후위기에 관심을 갖고 활동 경력을 가진 당선자들이 어느 정도 늘었다고는 하지만, 이들 역시 기후 정치인으로서 총선에 임했다기 보다는 기성 거대 정당과 위성 정당에 수혈되는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기후 사회운동과의 연결고리도 강하지 못한 상태다.

이는 한국의 제도 정치 내의 기후정치가 경로의존성을 탈피하기 쉽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해준다. 20대와 21대 국회에서도 기후특위가 있었지만 적극적인 활동을 보여주지 못했다. 심지어 '녹색성장' 기조를 벗지 못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여야 의원들의 대부분 동의로 입법되었고, 반면에 시민사회의 청원을 통해 발의된 탈석탄법은 제대로 심사되지 못했다.

물론 기후 대중운동의 성장과 기후 유권자 운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과 언론이 보이는 적극적인 반응은 유의미한 변화다. 그럼에도, 22대 총선에서 보였듯이, 두 거대정당 사이의 양자 택일을 강요하는 정치 속에서 기후위기와 같이 우리의 긴 미래를 규정할 중요한 문제들은 다시금 뒤로 밀려났다. 선거 제도 개혁으로 '정치 다양성'을 키운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기후 정치 또는 기후 민주주의의에는 턱없이 미달할 것이 분명하다.

4. 한국의 정치체제가 가로막는 기후정치

22대 총선에서 다시 확인된 한국 기후정치의 현실을 넘어서려면 우리의 논의는 한국의 정치 제도와 관행 자체가 기후악당이고 기후 지체의 주범이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하고 출

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금과 같은 5년 단임 대통령중심제와 그것이 낳는 단기적 시야의 승자(양당) 독식 정치는 기후위기 대응에서 최악 중의 최악의 제도와 관행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실과 행정부의 부처는 단기적인 지지율에 목을 매고 개발과 성장을 위한 헛된 약속을 남발하기 마련이고, 야당도 다음에 권력을 되찾기 위해 똑같은 개발과 파괴에 몰두하게 되기 때문이다. 입법과 예산 편성만을 담당하는 국회는 기후 정책에서 실제로 아무런 권한과 책임이 없으니 카메라 앞에서 당 지도부의 저격수와 방어막 노릇 말고는 할 일이 없다. 이런 정치 체제를 그냥 두고 87년 대투쟁으로 얻은 대통령 직선제에 머물러 있어서는 진지한 기후 민주주의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 그 이유를 간단히 정리해보자(김현우, 2021; 김현우 2024).

첫째, 선출직 국회의원과 대통령에게 자기 임기 이후의 일까지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무리다. 앞으로 몇년 사이에 자신의 지역구에 그럴듯한 랜드마크라도 세워야 득표에 도움이 되는데, 예를 들어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이나 2100년 경의 대량멸종 사태가 선출직 정치인들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둘째, 지금과 같은 국회의 구성 자체가 기후위기를 반영할 수 없는 구조다. 가장 많은 에너지를 가장 저렴하게 쓰고 편의를 누리는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선출되는 의원 숫자가 70%가 넘고 기후위기의 피해를 떠안는 농어촌은 인구 감소로 인해 거대 선거구가 되고 있는 탓에 기후 기득권 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 셋째, 해방 이후 줄곧 한국 정치를 지배해온 성장주의 아래에서 정치인들은 예외가 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무분별한 성장에 앞장서야만 하는 운명이다.

한국의 정치제도와 구조, 즉 5년 단임 대통령제와 거대 양당 구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에 어떻게 작용할지를 좀 더 생각해보자.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가 보수적으로 전망하는 티핑 포인트 시간표를 따르더라도, 기후 재난을 피하려면 2030년에 대략 지금의 절반까지 그리고 2050년까지 배출제로에 이르도록 일관되게 그리고 더욱 강화된 목표와 수단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해가야 한다. 이 과제를 달성하려면 정부의 시그널이 장기적으로 분명하게 유지되고 공무원과 기업, 그리고 시민이 이를 인지하면서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다른 많은 정책들이 그렇듯,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5년을 주기로 '리부팅' 된다. 정부가 바뀌면 이정 정부 시기의 서류들은 캐비닛으로 들어가고, 담당 공무원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교체된다. 4년마다 의원과 보좌관이 바뀌는 국회도 마찬가지다. 주기적인 레임덕과 선거 준비시기를 빼면 결국 청와대(대통령실)는 대략 4년, 국회는 3년씩만 일하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30년 뒤의 미래는커녕 5년 뒤도 내다볼 틈이 없고, 다음 선거에서 이기는 데에 도움이 되는 인기 있는 정책과 예산만이 중요하게 간주되는 것이다.

5년 단임제가 아니라 4년 중임 대통령제라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8년 임기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이루어진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사정이 조금은 나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개인의 의중에 모든 것이 맡겨진다는 점, 전문성과 민주성을 담보할 수 없는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실 인사들이 실제 정책을 좌우한다는 점, 그리고 집권당이 장관을 내각에 파견하지도 않고 정책과 실행에 실제로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은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의회중심제에서는 집권당이 재집권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정책의 연속성이 어느 정도 유지된다. 그 정당의 예비내각(섀도우 캐비넷)의 산업부와 환경부 장관 등이 지속적으로 다음 정부의 기후 정책을 책임있게 감시하고 문제를 제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여야 정당 모두가 자신들이 내세운 당의 파견자로서의 장관과 총리, 그리고 예비 장관과 총리로서 정책을 제안하고 판단하며, 당론을 통해 이를 실현하거나 비판한다. 하지만 지금의 대통령제에서는 자신의 임기 뒤에 기후 정책이 탈선할 것을 걱정하고 책임지는 장관도 없고 정당이 장관을 통해 정책을 실현하고자 노력할 이유도 없다. 당론 없고 책임 없는 정당과 장관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기후 정책과 정치 제도가 갖는 관계에 관한 일부 연구들도 이런 측면을 보여준다. 국가의 환경정책은 정책결정 기구의 중앙집권성의 정도 및 사회세력의 영향으로부터의 독립성 정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의원내각제의 국가들은 대통령제 국가들보다 국제 및 국내 기후 의무공약 설정에 적극적이며(Dolsak 2001), 의원내각제의 지도자들은 국제 조약을 비준함에 있어 대통령 체제보다 더 성공적이었다는 것이다(김의영 외, 2012)는 연구도 참고할 수 있다.

물론 어떠한 정치체제든 장단점이 있고, 의원내각제가 기후위기 해결을 보장해준다고 말할 것도 아니다. 그러나 핵심은 지금과 같이 주기적으로 리부팅되고 정작 중요한 의제와 쟁점들은 구조적으로 배제되는 정치체제로는 기후위기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기성의 국가 제도정치 바깥의 정치만을 기후정치의 활로로 삼을 경우 현실의 선거 정치와 대중적 정치 담론에 대해서는 개입력을 잃게 된다. 현행 대통령제의 대폭 변경 또는 교체라는 대안의 선택지를 가질 때 기후정치는 이러한 중요한 개입 지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5. 한국의 성장주의가 가로막는 기후정치

앞서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 여론의 특징을 언급했지만, 이제까지 기후위기를 대면하는 한국의 제도 정치와 주류 언론의 상황은 기후과학에 대한 부정이라기보다는 대체로 '기후침

묵'에 가까운 것이었다. 기후과학은 인정하지만 한국 내에서의 구체적인 기후변화 원인과 해법을 찾고 다루는 데에서 발생하는 곤란함은 침묵으로 회피하는 것이다.

기후위기에 대한 한국 정부와 여론의 소극적인 태도는 한국에서 기업이 갖는 위상과도 관련된다. 한국에서는 포스코 같은 철강회사, 삼성전자 등 반도체 회사,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 시멘트 회사 등 온실가스 다배출 상위 10개 기업이 국가 탄소 배출량의 절반을 배출하고 있다.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의미있는 수준으로 매년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가야 국가 배출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자명하다. 하지만, 역대 정부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정책은 이런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일관되게 진행되었다. 경제성장을 희생하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 주문은 타이타닉호를 잠시 멈추거나 방향을 급선회하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이라는 인식과 고정 관념이 정부뿐 아니라 시민 사이에서도 강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9년에 툰베리로 상징되는 세계적 기후행동의 물결을 거치고 국내외적 압박이 본격화되면서 정부와 기업의 태도도 바뀌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포하고 한국형 그린뉴딜, 탄소중립 시나리오 등을 연이어 발표했다. 하지만 기후침묵의 뒤를 이은 것은 일종의 허구적 기후정치에 가깝다. 성장을 해치지 않는 기후정치라는 기만의 밑바탕에 있는 게 한국에 더욱 특수하게 자리잡은 성장주의다.

홍덕화는 이명박 정부의 2009년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부터 문재인 정부의 2020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윤석열 정부의 '2023년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등을 살펴보면서, 정부가 바뀌면서 기후 정책도 변화했지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시도와 맞물려 있다는 공통점이 더 두드러진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은 언제나 국제 사회의 요구와 한국의 책임성에 비해 소극적인 수준이었고, 그마저도 목표 달성에 계속 실패해왔다. 물론 이유는 산업 부문의 성장률과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은 건드릴 수 없는 것으로 둔 채 아직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한 신기술과 시장위주 해법에 치중해 온 탓이다.

홍덕화는 이런 한국 기후 정책의 난맥상과 독특한 전개 양상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바라봐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한국의 국가 주도의 수출주의와 저렴한 인프라라는 구조와 제도다. 따라서 한국의 녹색성장과 탄소중립 역시 국내적 요인보다 수출 시장의 압력에 의해 추동되었고 여기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기업의 요구에 좌우되면서 성장 동력을 위한 선별적 지원이 강화된다. 그래서 홍덕화는 탄소중립 녹색성장의 부상은 국가와 자본의 기후위기 대응이 체계화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라고 본다. 그리고 수출주의 성장체제에서 유래하는 저렴한 인프라와 분절적 녹색성장의 특징과 한계를 면밀히 분석할 때, 전환의 조건과 경로에 관한 논의도 한층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홍덕화, 2023).

이렇듯 한국은 수출주도 성장이라는 강박이 정책 원리를 넘어서 거의 종교적 신념에 가까운 것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에서 역사적으로 몇 가지 계기를 거치면서 만들어지고 강화되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단계와 상징은 다름 아닌 박정희의 성장주의다. 1960년대에서 70년대까지 걸친 박정희의 집권 기간은 한국의 성장주의에 특징적인 중요한 장치와 배열(경제 인프라, 제도, 정치 체제, 이데올로기, 도시 등)이 형성되고 경로 의존성이 만들어진 때다.

박정희 개인이 치밀하게 구상하고 의도했든 그러지 않았든, 그의 통치 시대에 한국이 물질적 향상을 이루고 거의 기적적인 속도의 경제 성장 덕분에 국제 사회에서 상당한 지위에, 거의 준제국주의 국가적 지위에 오른 것이 사실이다. 88 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 개최는 일제 시대와 전후의 폐허상과 대비되고 그 사이에 한강의 기적이 자리한다.

한국의 정치권뿐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박정희의 대통령으로서의 공과가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민주화 세력은 이미 5.16 군사 쿠데타 이전에 민주당이 경제개발 계획의 기초를 만들어두었기 때문에 박정희만 경제성장을 가능케 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하곤 한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박정희 정권이 지금과 같은 한국 성장주의의 원형을 만들었고 그것이 지금도 큰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 태극기 부대 집회에 등장했던 “촛불 끄고 원전 켜라”라는 구호는 박정희가 이룬 경제 성장의 표상으로서의 핵발전과 이를 무시하는 민주진보 정부의 탈원전을 대립시킨다. 박정희와 한강의 기적은 거의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 이런 숭배는 이후 박근혜에 대한 숭배로, 그리고 이명박과 박근혜가 감옥에 간 이후에도 박정희라는 신의 부재를 한탄하는 아우성으로 이어졌다.

심지어 박정희와 맞서 싸워왔던 사회운동에도 성장주의의 많은 요소들이 들어있다. IMF 위기를 거치면서 노동운동의 주역들도 기회가 있을 때 더 일하고 더 벌어두자는 강박을 내면화하게 되었고, 경제 위기를 거칠 때마다 70~80년대 성장으로의 회귀 욕구는 더욱 커진다. 이러한 과거와 같은 성장이 가능하지 않게 된 것이 드러나게 되자, 젊은 세대들은 부모의 경제력에 대한 의존과 공정한 기회에 더욱 매달리게 되었다. 2019년 <세계일보>의 여론 조사는 한국의 20대에게서 기후변화에 대한 공감 정도가 가장 낮다는 결과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역시 성장과 경쟁에 시달리는 세대에게서 공감 보다는 체념과 적대의 감정이 함께 자리잡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성장주의라는 이데올로기,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경제 발전 정책과 제도, 그리고 정치인과 시민들에게까지 뿌리 내린 성장 강박증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기후정치는 원칙과 이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거꾸로 말하자면, 한국에서 기후위기를 대면하고 해결하

는 정치는 성장주의와 맞서 싸우고 다른 미래를 상상하게 해주는 이론, 정치 제도, 그리고 녹색 정동의 정치여야 할 것이다.

5장. 결론: 정치와 관계의 재구성을 위한 제안

1. 기후위기 시대, 정치의 의미와 방식의 전환

기후위기 시대의 정치는 의미와 방식 모두에서 큰 전환이 요구된다. 이는 한편으로는 제도 정치의 변화 뿐 아니라 경계를 넘어서는 확장을 포함한다. 여기서 김주형, 서현수가 제기하는 '민주적 혁신' 개념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들은 민주적 혁신을 "시민참여의 확대와 심화를 통해 전통적 대의제 정치를 쇄신하고 재구성하려는 제도, 과정, 운동"을 가리킨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개념의 중핵을 구성하는 두 요소는 '시민참여'와 '대의제 정치의 쇄신 및 재구성'이다. 이 개념화가 기존의 방식과 중요하게 구분되는 지점 중 하나는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특별히 설계된 제도"와는 다른 자생적인 조직과 운동의 영역을 포함한다는 것이다(김주형, 서현수, 2021). 이는 앞서 살펴 본 기후정치의 유형 중 미국의 선라이즈 운동부터 툰베리의 학교 기후파업 및 세계적 기후운동 물결에 잘 들어맞는 개념이다.

기후위기 시대의 정치는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조건 하에서 자원을 배분하고 차선을 선택하는 방식의 정치의 변화 요구한다. 기후위기 시대의 정치는 제도 정치와 사회운동 및 시민의 삶을 관통하는 정치의 상을 제시해야 한다. '기후 베헤모스'를 순치하고 '기후 X'를 활성화할 구체적인 도구와 방안들이 있어야 한다.

나아가서 정치의 주체의 확장(미래세대, 지역, 비인간 자연)과 의제의 적극적 확장(지구행성적 한계를 고려하는 도넛경제학의 정책 규범화) 역시 필요하다. 이러한 주체와 의제의 확장은 자연스럽게 기성 제도 정치와 방식의 한계를 드러내고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기존의 것들 바깥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며, 기성의 제도와 관행 그리고 주체들이 중요한 마중물과 지렛대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즉 기후위기 시대의 '좋은 정치'와 '다른 정치' 모두 필요하다. 좋은 정치는 분명히 유효하고 필요한 대안이지만 사람들의 불가능하거나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느낌과 상식을 그렇게 모아내는 정치다. 그 속에서 기후위기 시대의 다른 정치도 발견되고 연결될 수 있다.

슈테펜스와 하베쿠스는 코로나 위기에서 그런 힌트를 발견한다. 그들은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사람들이 사회적 규범 및 가치관과 일상의 습관을 바꾸려면 반드시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님이 입증되었다면서, 폭넓은 찬성이 있으면 신속한 변화도 가능하다고 말한

다. 그리고 최대의 투명성과 진정성은 급진적인 정치적 결정에 대한 사회의 수용성을 높이고, 그러면 개인적 자유의 일정한 제한마저도 가능하고 본다. 요컨대 투명성은 근본적 개혁의 가장 중요한 전제들 중 하나다. 또한 정치가 과학 지식을 부정하거나 상대화하지 않으면 정치의 신뢰성이 향상된다. 과학 지식을 존중하면 정치적 행동 반경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된다.

그래서 이들은 정치철학자 존 롤스가 “현실적-유토피아적(realistic-utopian)”을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을 환기한다. 코로나 팬데믹이나 대멸종처럼 규칙을 변화시키는 근원적 폭력을 우리가 사유를 통해 선취한다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실천적-정치적으로 가능하다고 여기는 행동의 범위가 확장될 것이라는 말이다. 이례적인 난관에 대처할 수 있기 위해 우리는 사유를 제한하는 울타리를 폭파해야 한다. 그래서 이들은 생태 비상사태 선포, 자연을 위한 거부권을 현실 정치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제안한다(슈테펜스 & 하베쿠스, 2021).

2. 정당책임제와 기후 시민의회라는 대안

기후정치는 현재의 정치 및 운동 지형과 전망에 근거해서 개입 지점을 확보하고 다양한 시도를 전개해야 한다. 이를 위한 종합적 바탕이 되는 얼개로서 “기탈존내(기후위기, 탈성장, 존재 다양성, 내각제 개헌)”라는 키워드를 제안해본다. 우리에게 기후정치를 실현할 정당이 요구된다면 바로 이러한 기치를 내 건 정당일 것이다.

첫째, 기후위기는 우리가 처한 그리고 앞으로 맞닥뜨려야 할 세계와 상황을 집약한다. 물론 우리에게는 수많은 사회적 위기와 부조리가 산적해 있다. 그러나 우리 공동의 집이 불타고 있고 계속 더 크고 자주 불타고 있다는 압도적이고 지속적인 상황이 우리의 상황 인식의 축과 촉수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인식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경제, 사회, 정치, 관계를 만들고 이를 위해 제도와 예산을 편성하고 싸워나가고 서로를 보살펴야 할 것인지를 가장 먼저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정당이 있다면 기후위기 때문에 모이고 더 커지고 세상을 바꿀만한 힘을 가져야 할 정당이다.

둘째, 탈성장은 우리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방향과 핵심 방법을 이른다. 무한 확장과 무질서한 시장 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기후위기를 포함하는 문제를 악화시키고 해법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성장주의에 대적하고 악무한적 생존 경쟁을 중단하고도, 오히려 그래야만 더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으로서 탈성장을 다양하게 상상하고 실험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정당은 성장주의 강박에서 벗어나서 돌봄과 공생공락을 주류적 비중의 경제 원리와 사회적 관계로 만들자고 주장하고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실현하며, 탈성

장하고자 하는 존재들을 격려하고 증식하는 정당이다.[2)]

셋째, 존재 다양성은 우리가 확인하고 지켜야 할 가치와 존재를 환기한다. 우리의 삶을 위태롭고 힘들게 만드는 자본주의 공식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홀대받고 배제되는 자연, 소수자, 장애인들 그리고 경제 빙산의 수면 아래에 존재하고 작동하는 수많은 가치와 활동들이 그 자체로 존중받고 보장되는 사회가 아니라면 우리는 거대한 위기를 해결할 수도 없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이유를 갖는 사회도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정당은 최대 다수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지배 권력과 지배적 인간에 봉사하는 획일적 가치와 세계가 아니라 존재의 다양한 형태와 방법을 북돋고 보살피며 그 자체가 다양한 존재들의 정당이다.[3)]

넷째, 내각제 개헌은 이러한 인식과 지향을 현실 정치에 개입하고 바꾸면서 실현하기 위한 핵심 지렛대다. '기탈존내'의 사회는 거리에서의 몇 번의 외침이나 팔짱 낀 평론만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기성의 정치 제도와 관행을 허물고 바꾸기 위한 대결과 침입으로 돌파구를 열고 무게중심을 바꾸어야 가능하다. 우리는 기성의 제도를 묵인해서도 안 되고 기권주의에 빠져서도 안 된다. 기후위기 해결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성장주의를 더욱 강화하며 존재 방식을 획일화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5년 단임제 대통령제에 대한 가차없는 비판이 중요한 출발이자 논의의 물꼬를 트는 매개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내각제는 모든 해결을 담보하지는 않지만 기후정치에서 반드시 재론해야 할 정치 제도다. 추상적이고 느낌이 잘 와닿지 않는 내각제보다는 예를 들어 '정당책임제'[4)]라는 표현이 더욱 그 필요성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다. 핵심은 정당이 장관을 정부에 파견하고 기후와 경제 정책에 책임을 지며, 각각 인구의 4%가 넘는 220만 명의 농가 인구와 240만 명의 장애인을 대표하는 12명+12명 이상의 농민과 장애인 의원, 그리고 소수자와 미래 세대가 활동할 수 있는 국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국회와 정부로도 2030년, 2050년, 2100년 기후위기의 미래를 대비하고 해결하기 어려움이 분명하다면 기후 시민의회를 병행하는 정치 체제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정당은 기후위기의 원인과 해법에 책임을 지는 정치, 탈성장의 미래를

---

2) 탈성장의 개념과 정치 전략에 대해서는 마티아스 슈멜처 외, 『미래는 탈성장』(나름북스, 2023); Barlow, Nathan et al., Degrowth and Strategy(국역본: 탈성장과 전략), 그리고 탈성장을 한국의 맥락과 현장에서 수용하는 사례로는 공규동 외, 『탈성장을 상상하라』(모시는사람들, 2023), 백솔빈 외, 『탈성장들: 하며 살고 있습니다』(모시는사람들, 2024)을 보라.

3) 자본주의가 강요하는 제 1세계 방식의 경제 성장이라는 유일한 세계라는 의미에서의 '유니버스'를 비판하면서 중남미의 세계관에서 다중적인 세계와 가치에 기반한 사회 설계를 지향하는 것이 '플루리버스'다(에스코바르, 2022)

4) 내각(책임)제 또는 의회중심제 대신 '정당책임제'라는 용어를 제안하는 이유는, 이 제도가 정당이 국가의 기본 정책뿐 아니라 총리와 장관을 배출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는 측면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다. 또한, 현재의 한국 국회가 기후위기에 실제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정당 무책임제'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가능하게 하는 정치, 존재 다양성이 존중받는 정치가 가능한 정치체제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정당이다.

아울러, 우리는 기후위기 앞에서 대의제의 한계를 드러내고 이중권력을 상시화하는 프로젝트이자 의제로서 기후 시민의회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 기후 시민의회의 요구는 기성 제도정치와 민주당에 의탁해 온 시민사회운동 모두에게 회피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는 기획이다.

3. 기후정치와 기후운동의 전략과 과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시민 기후운동이 제출한 일련의 요구들이 이미 존재한다. 그러나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들기 위해서는 올바른 또는 도덕적 주장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기후위기의 절박함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가증한 미래에 대한 상상이 제시되어야 하며 그것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이는 개별 정책 요구의 단순합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며, 기후정의를(이 역시 원칙이 아닌 역동적이고 풍부한 이미지로서) 구현하고 기후 운동을 통해 우리가 함께 만들 수 있는 안전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그려주는 스토리텔링 또는 내러티브가 더욱 필요하다.

그런데 내러티브는 운동 전략의 기초이자 결과물이기도 하며, 이러한 내러티브가 빈약한 것은 한국 기후운동의 역량과 현 주소이기도 할 것이다. 물론 지난 5년간 한국 기후운동의 노력과 성과는 작지 않은 것이었지만, 그러나 일상적으로 축적된 정치 의제와 정치적 에너지가 짧은 시간과 계기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선거라는 이벤트라고 볼 때, 한국의 기후운동은 충분한 내포와 외연을 만들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현 체제, 즉 지금의 경제 구조와 성장 문화에 기반하고 있는 정치세력과 정당(이것 역시 기후위기의 중요한 원인이자 일부인)의 후보들이 기후위기에 진심으로 반응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망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현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의 실패를 남김없이 고발하고, 체제 변화에 공감하고 함께 움직이는 3.5%[5]를 만드는 과정으로 만드는 노력이 훨씬 중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어니스트 칼렌바크의 1981년 작『에코토피아 비긴스』는 환경오염, 핵발전의 위험, 석유와 자동차 의존, 군사 경쟁 같은 문제들을 외면한 채 정치적 손익에만 몰두하

5) '3.5% 법칙'은 역사학자 에리카 체노웨스가 각국의 사회운동을 분석한 결과 도출한 숫자다. 체노웨스는 운동의 최전성기에 사회 구성원의 3.5% 이상이 참여한 운동은 비폭력 시민운동으로 성공했다는 경험적 증거를 발견했다. 영국의 멸종반란은 이 3.5%를 기후운동의 조직화 성공의 한 기준으로 삼고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체노웨스 외, 2019).

는 미국 정치에 문제의식을 느낀 이들이 ‘생존주의자 당(Survivalist Party)’을 결성하고 캘리포니아 등 3개 주를 연방에서 독립시켜 생태자치공화국을 만드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기후위기를 염려하는 정체세력과 시민사회 조직들도 그들 정도의 절박함과 결의를 보여주고 둥지를 허무는 모습을 보여야 의미있는 구성이 가능할 것이다(칼렌바크, 2009).

기후위기를 진지하게 말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현장에 밀착한 투쟁으로 기후위기를 풀어내는 정치인과 정당의 존재는 너무도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러나 더 나은 정치인과 정당으로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기후정치로의 전환이 체제 전환의 일부라는 것을 구체적인 매개로 드러낼 필요가 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크게 보고 더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하며, 기성 정치를 바꾸려면 원칙론과 비판에서 몇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몇 년은 현행 대통령제 폐지와 정당책임제를 포함하는 기후위기 대응 정치 제도의 재구성, 환경과 공존 및 연대의 가치를 분명히 하는 ‘녹색국가’ 지향을 담는 생태개헌 제안으로 우리 스스로 의제의 스케일을 키우고 대중적 토론을 촉발해야 할 때다.

기후정치와 기후운동의 공통 과제로 다음을 제시하며 마무리한다. 첫째, 제도 정치와 운동 정치 양극단에 빠지지 않으면서 중앙/지역 정치를 급진화하고 풍부화하기 위한 구상을 만들고 공유하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당장의 지렛대가 될 의제와 정책을 확보하고 가다듬어야 한다. 여기에는 생태개헌안뿐 아니라, 한국판 좌파 그린뉴딜의 컨텐츠, 탄소세와 탄소배당 같은 핵심적 감축과 재정 확보 수단, 노동시간 단축 같은 사회적 메시지가 큰 정책과 운동 의제가 포함된다. 셋째, 녹색정동(생태적 포퓰리즘)을 위한 논의와 실험이 시작되어야 한다.

몇 차례 인용했던 저자들인 스테펜스와 하베쿠스는 만일 녹색 전환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그 출발점은 대통령들과 총리들이 서명한 법령이 아닐 것이며, 오히려 더없이 다양한 생각을 품은 수많은 사람에 의해 수많은 장소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한다(슈테펜스 & 하베쿠스, 2021). 기후정치는 무엇보다 그러한 이야기를 담아 내고 이끌어 내는, 정치를 바꾸는 정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Barlow, Nathan et al. (2022), Degrowth and Strategy: how to bring about social-ecological transformation. (국역: 탈성장과 대안 연구소)

Dolsak, Nives (2001), “Mitigating Global Climate Change: Why Are Some Countries More Committed Than Others?”, Policy Studies Journal 29(3).

Konzeptwerk Neue Ökonomie (2023), Bausteine für Klimagerechtigkeit: 8 Maßnahmen für eine solidarische Zukunft.

Lamb, W. et al. (2020). “Discourses of climate delay”, Global Sustainability, 3, E17.

Lovins, Amory. (1976), “Energy Strategy: The Road Not Taken?”, Foreign Affairs, Vol 55. (Oct 1976)

Mastini, Riccardo, Giorgos Kallis, Jason Hickel (2021), “A Green New Deal without growth?”, Ecological Economics 179.

Searle, Rick (2019), “Pray for a Good Behemoth”, https://utopiaordystopia.com/2019/11/01/pray-for-a-good-behemoth/

Staurt, Diana et al. (2024), A Climate Agenda for System Change: From Theory to Social Transformation, mayfly.

기후위기비상행동 (2021), 「보도자료: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대선을 위한 10대 대표 정책 선정」.

기후위기비상행동 (2024a), 「기후위기비상행동 2024 기후정치선언」.

기후위기비상행동 (2024b),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정당 10대 정책 평가」.

기후위기비상행동 (20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정당 10대 정책 평가」.

기후정치바람(준) (2024a), 「2023 기후위기 국민 인식조사 전국 보고서」.

기후정치바람(준) (2024b), 「보도자료: 제22대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254명 기후공약 전수 조사 결과 발표」.

김의영 외 (2012), 「국제화에 따른 환경정책 입법의 특징과 국회의 대응과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정책의 해외 입법례를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김주형, 서현수 (2021), 「민주적 혁신의 개념과 유형: 민주주의의 회복과 재발명 사이에서」, 『현대정치연구』 2021년 겨울호 (제14권 제3호).

김현우 (2021), 「기후위기 시대, 6공화국에서 대처 가능한가?」, 『보다 정의』 창간준비 3호, 정의정책연구소.

김현우 (2023), 「기후민주주의와 기후정치」, 『녹색평론』 183호 (2023년 가을호).

김현우 (2024), 「기후위기를 넘어 생태 사회로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보다 정의』 10/11 합본호, 정의정책연구소.

나오미 클라인 (2016),『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자본주의 대 기후』, 이순희 역, 열린책들
나오미 클라인 (2021),『미래가 불타고 있다: 기후 재앙 대 그린뉴딜』, 이순희 역, 열린책들.
C. 더글러스 러미스 (2011),『경제성장이 안 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김종철 최성현 공역, 녹색평론사, 2011.
데이빗 월러스 웰즈 (2020),『2050 거주불능 지구: 한계치를 넘어 종말로 치닫는 21세기 기후재난 시나리오』, 김재경 역, 추수밭.
도넬라 H. 메도즈, 데니스 L. 메도즈, 요르겐 랜더스 (2021),『성장의 한계』, 김병순 역, 갈라파고스.
디르크 슈테펜스, 프리츠 하베쿠스 (2021),『인간의 종말: 여섯 번째 대멸종과 인류세의 위기』, 전대호 역, 해리북스.
사이토 고헤이 (2021),『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기후위기 시대의 자본론』, 김영현 역, 다다서재.
상드린 딕손-드클레브 외 (2023),『모두를 위한 지구』, 추선영, 김미정 역, 착한책가게.
상탈 무페 (2022),『녹색 민주주의 혁명을 향하여: 좌파 포퓰리즘과 정동의 힘』, 이승원 역, 문학세계사.
아르투로 에스코바르 (2022),『플루리버스: 자치와 공동성의 세계 디자인하기』, 박정원 엄경용 역, 알렙.
아미타브 고시 (2021),『대혼란의 시대』, 김홍옥 역, 에코리브르.
안드레아스 말름 (2021),『코로나, 기후, 오래된 비상사태: 21세기 생태사회주의론』, 우석영, 장석준 역, 마농지.
앤서니 기든스 (2009),『기후변화의 정치학』, 홍욱희 역, 에코리브르.
어니스트 칼렌바크 (2009),『에코토피아 비긴스』, 최재경 역, 도솔.
에리카 체노웨스, 마리아 J. 스티븐 (2019),『비폭력 시민운동은 왜 성공을 거두나?」, 강미경 역, 두레.
에릭 홀트하우스 (2021),『미래의 지구』, 신봉아 역, 교유서가.
요한 록스트룀, 오웬 가프니 (2022),『브레이킹 바운더리스』, 전병옥 역, 사이언스북스.
울리히 벡 (1997),『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홍성태 역, 새물결.
이지문 (2022),「기후시민의회는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가?」, 생태적지혜 웹사이트. (2022년 3월 18일)
제이슨 히켈 (2021),『적을수록 풍요롭다』, 김현우 민정희 역, 창비.
젬 벤델, 루퍼트 리드 (2022),『심층적응』, 김현우 외 역, 착한책가게.
조엘 웨인라이트, 제프 만 (2023),『기후 리바이어던: 지구 미래에 관한 정치 이론』, 장용준 역, 앨피.
조지 마셜 (2018),『기후변화의 심리학: 우리는 왜 기후변화를 외면하는가』, 이은경 역, 갈마바람.
트로이 베티스, 드류 펜더그라스 (2023),『지구의 절반을 넘어서』, 정소영 역 이콘.
티머시 미첼 (2017),『탄소 민주주의 : 화석연료 시대의 정치권력』,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역, 생

각비행.
한국갤럽 (2022),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 관련 인식」 (WWS 다국가 비교 조사).
홍덕화 (2023), 「“수출”부터 다시 봐야하지 않을까?」, 『기후위기, 전환의 길목에서』, 도서출판풀씨.

김수진 (2024), “양당정치가 기후위기 해결 막아... 문재인 탈원전, 왜 뒤집어졌나?” (오마이뉴스, 2024. 1. 16.).
세계일보 (2019), “머리로만 "지구 살려야 …" "공공의 문제" 치부 행동 안해” (2019. 7. 22.)
이유진 (2024), “22대 기후국회를 위한 10대 ‘자원’” (민중의 소리, 2024. 5. 6).